

투데이 칼럼

이항로 진안군수 2기 출범의 의미

이 항로 진안군수는 2일 오전에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며 했으나 태풍 뿐만 아니라 북상으로 인해 취소하고, 인사발령 공무원 사령장 교부를 시작으로 태풍피해에 대비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종일관 진안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이신을 개발해야 하며, 케이블카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군민들을 설득한 반면, 상태 군수후보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반대하며 설치비용을 군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반대해 왔다.

그 결과 군의원을 거쳐 현직 도의원이던 김현철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도내 언론사에서 2회(4월 5일, 10일)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5~50% 정도 이항로 예비후보보다 낫게 나오자, 민주당은 이항로 예비후보 단수공천으로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본선인 6·13지방선거에서는 후보 간 간격이 더욱 벌어졌다. 민주당 이항로 후보가 70.56%, 민병당 이충국 후보 17.47%, 무소속 박수우 후보 11.96%로 다자간 대결에서 도내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앞도적인 군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



우태만

지방부 진안주재 국장

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동안 환경단체와 여기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 등이 진안부군수를 지낸 송남오 후보 40.8%, 농민운동 출신 민주당 임수진 후보 50.1%로 행정 경험과 농민운동가의 대결로 임 후보가 9.3%P 차로 승리했다.

1998년 6월 4일 치러진 2대 선거는 새정치국민회의 송영선 후보 41.1% 무소속 임수진 후보 50.6%로 1대 군수를 역임한 임수진 후보가 새정치국회의 공천에 탈락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송 후보를 11.5%P 차로 이기고 당선됐다.

2002년 6월 13일 치러진 3대 선거는 새천년민주당 임수진 후보 41.7% 무소속 송영선 후보 34.9%로 6.8P 차로 임 후보가 당선됐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2대 선거와 비교, 후보 간 당과 무소속으로 두 후보가 바

뀐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2006년과 2010년에 치러진 4대 5대 선거는 1대처럼 농민운동 출신 열린우리당 송영선 후보 45.0%, 진안부군수를 지낸 무소속 박관삼 후보 37.5%로 8.4%P(5대는 8.5%P) 차로 송 후보가 연속 두 번 당선됐다.

5대 선거는 우여곡절이 많은 선거로 기록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평노 후보, 무소속 송영선 후보, 무소속 이항로 후보 등 세 후보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접전 끝에 이평노 후보 32.5%, 송영선 후보 29.9%, 이항로 후보 37.45로 4.9%P 차로 이항로 후보가 당선됐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6번의 군수선거에서는 정책선거가 아닌 당이나 인물, 지역연고 등이 선거 쟁점이었으나 이번에는 케이블카 설치와 반대로 나뉜 정책선거로 군민들은 이항로 군수의 케이블카 설치에 큰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이항로 군수의 지난 4년간의 군정에 대한 성적표도 되겠지만, 앞으로 경제 살리기에 총 매진하라는 군민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독자제언

대포차, 운행정지명령으로 해결하세요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란 명의 이전이 안 된 중고자동차를 일컫는 말로 대포차가 양산되는 주요원인은 개인 간의 재무로 인한 차량인수,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채권자 차량인수, 외국인의 출국 시 차량방치, 도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로 대포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며, 보험사에서도 대포차 여부를 100%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그 행위자를 찾아 조사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등록, 명의자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정기검사, 운행 시 속도위반 등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불합리를 겪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2월부터 운행정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생겼으며, 차량등록 명의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 24조 2의 1항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동차시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법 제 12조 1항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각각 제 81조 7호의 2, 제 81조 2호(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포차의 소유자는 조세, 과태료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앓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처를 통하여 불필요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

정해인 군산경찰서 중앙피출소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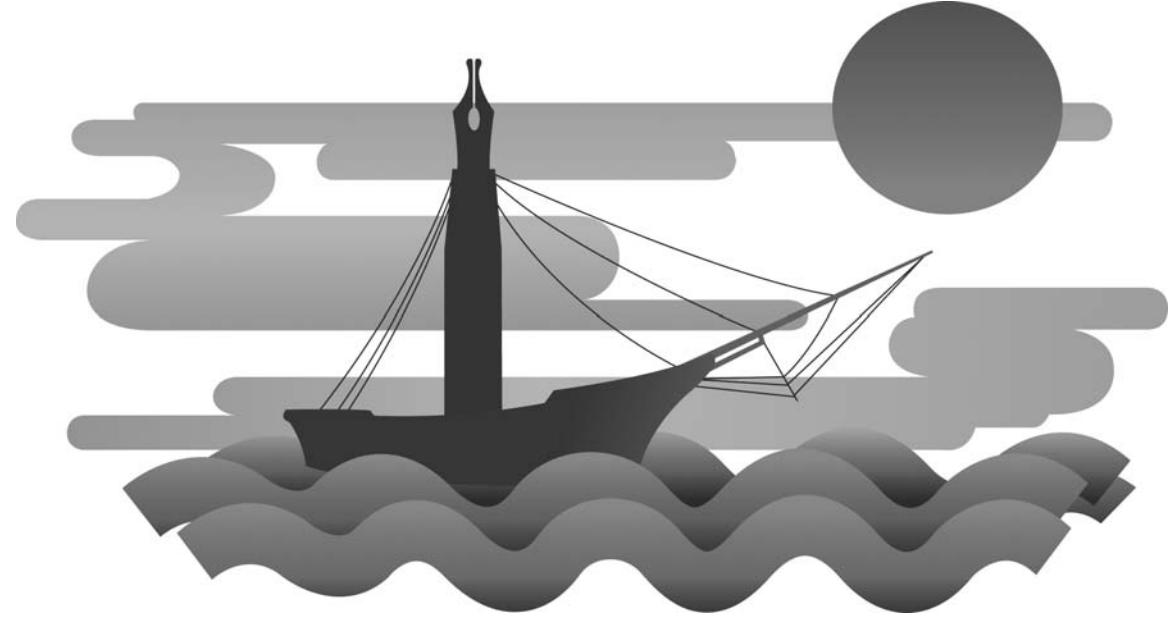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태국의 '희망 13' 동굴 입구



지난달 23일부터 소년 축구선수 12명 등 13명이 들어간 뒤 훈수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락도 없는 태국 치앙라이주 탐루앙 동굴 입구에서 30일 구조대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흙탕 물 속으로 들어갈 체비를 하고 있다. 입구에서 아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구릉끼지는 2~3km 거리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시급한 일자리 창출 현안에 힘 집중해야

전북도는 시급한 현안에 힘을 집중해야겠다. 실제 피해자들이 풀이 죽을대로 죽어 있다. 도대체 희망의 근거랄 게 전혀 없는 아름더널 형국이다. 전북도는 이제 관심사를 하나로 집중해야겠다. 가장 시급한 현안에 우선적으로 시선을 주어야겠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바 우선순위의 현안에 제대로 힘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다른 고장은 괄목상대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세 월이 흙을수록 반비례하여 자꾸만 낙후되고 있다. 따라서 유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이다. 전북도는 며칠전 도민들을 향해 자존시대를 달랬고 대도약 시대를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슬로건이 언어수사 표현에 그치면 안되겠다. 이제 전북도는 제로를 행감에 있어 깊질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다른 광역시도들과 비교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편하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의 책임임이 크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급한 현안에 힘을 집중하면서 동

도로 보수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제7호 태풍 '嬖리비룬' 때문에 해변도 곳곳이 물폭탄을 맞았다. 도로나 교도 교량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야겠다. 이런 때를 대비해 도로를 미리 보수해야 한다고 했을때 당국은 빨 빠른 모습을 보이주지 않았다. 곳곳을 보면 상처부성이 도로 구간이 많은 게 그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평일에 보수에 만족을 기렸다가 자부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계자들의 생각일 뿐이다. 운전자와 입장에서나 브랜드의 입장에서 보면 이쉬운 곳들이 아직도 많다. 전주 시내의 도로가 그대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터이다.

예전에도 지적해 바가 있거나 포트 흘리 교제이다. 꽃 꽂인 계

로 있는 포트 흘들을 속리 보수해야 한다. 설마 누군 사고리도 발생이라 하는 마음 자체는 곤란하나. 그런 자세라면 늑장 보수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의 협판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운전자들이 지적해서라기보다 당국이 알아서 보수에 나서는 적극성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 보수는 한두 번 대

대적으로 하고 그려서 끝 게 아니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놓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